

李대통령 “지역에 대규모 규제 합리화 특구 만들자”

규제합리화위원회 첫회의 주제

“통상국가 흐름...규제 ‘네거티브’ 전환”
“불안하지만 믿어야...과감·신중히 개선”
박용진 등 부위원장 3명에 위촉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갇아먹고 있다”며 “지방 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그냥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뒤 열린 첫 번째 전체 회의이다. /연합뉴스

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핑계를 댄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

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 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맡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도 든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시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라며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그야말로 합리적으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직접 집행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각종 의결 권한을 통해 실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거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세 분야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옳은 방향을) 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신 먹살 잡고 헤어지진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격려했다. /김진수 기자

정진욱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해야”

AI시대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 핵심

韓실리콘밸리 육성 정부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확보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에 반도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기능을 동시에 갖춘 반도체산업 기반을 반드시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주가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첨단기술·벤처 창업의 요람이 되도록 새로 선출될 통합시장과 정부는 관련 예산 우선 배정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의 상징이 됐다. 광주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해 남부권 혁신벨트의 핵심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 의원은 K반도체 트라이앵글의 핵심인 영·호남권 분산 및 산업안보·균형발전 차원의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3회 연속 개최하는 등 꾸준히 광주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SK하이닉스 등 기업과 접촉해왔다.

정 의원은 “물·전력·인재 기반을 갖춘 전남광주특별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 입지로 손색이 없다”며 “이전 예정인 광주 군공항 부지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대규모 산업 용지를 기반으로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기능을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 간 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지도도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규모 반도체 공장 유치를 통해 광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이 머무는 미래도시로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천300만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유 2억7천300만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0만t을 추가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입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김진수 기자

김병주, 오늘 광주·전남서 방산업체 간담회

지역 일자리·공급망 경쟁력 강화 논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1시 가야 AutoLand 광주를

방문해 방산업체, 협력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산 사업장을 시찰한다.

현장 간담회는 광주·전남의 제조업 기반과 방산 공급망 역량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

로와 제도개선 과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기아를 포함한 방산업체·협력업체 임직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방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기반 방산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완성차·군용차량 생산 기반을 갖춘 광주의 제조 인프라와 항공·우주·무인기·국방벤처 지원 기능을 갖춘 전남의 산업 정책 역량을 연계해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미래 방산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